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2. 2. Vol. 5

■ 농정이슈

TPP 주요 동향 등

■ 정책브리핑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연구지원

2014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 현장여론

2015년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과 바램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TPP 주요 동향

〈정부, TPP 참여 선언(4월) 관련 해명〉

- [TPP 참여 관련] (인론) 정부, 미일 협상 진척상황 고려해 4월 TPP 참여 선언 예정
↔ (정부) 현재 TPP 참여와 관련한 입장 정한 바 없고, 향후 ①TPP 협상동향, ②TPP 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 의 경과, ③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④TPP가 우리경제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와 방식 결정할 계획

- (경제 4단체*, TPP 기업 설명회 개최, 1.26.) 올해 상반기 중 TPP 타결 전망됨에 따라 중요성 공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TPP 협상 타결 가능성 높다고 언급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한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제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1.28)에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메가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TPP 가입 필요성 역설

- [TPP 농업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 제기] TPP 기존 참여국 상당수 한국 농업 개방 수준에 불만이 크며, TPP 협상 정보 불투명성, 협상국들의 TPP 입장료 요구 가능성, TPP 협상력 저하 우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한국 TPP 관심 환영] 다만, 한국의 TPP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려워

자료 : 테일러리안아시아경제이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1.27.) / 서울경제(2015.1.28.) / 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1.29.)

참고 : 한국무역협회 공지사항_「경제 4단체 주최 TPP 기업설명회 개최」(2015.1.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자료_「정부 'TPP 가입' 4월에 공식선언 외(2015.1.28., 서울경제 가판)」(2015.1.27.), 한국무역협회 국내뉴스_「한덕수 무역회장 "경제 재도약 위해 TPP 조기 가입 해야"」(2015.1.28.)

〈TPP 협상 타결 막바지 단계〉

- [미국일본 간 TPP 협상 쟁점 품목(미국 자동차, 일본 농산물) 의견 조율 거의 접근]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거의 타결 윤곽이 드러난 막바지 단계, 앞으로 얼마 안 되는 개월 내 협상 끝내도록 집중, 의회에 신속협상권**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부여 촉구

㉔ 농정이슈

- ※ 상원 재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5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언급
- ※ ※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TPP 3월 잠정 타결 가능성)** 미국...농산물 관세 합의 도출, 일본...쌀 개방 미국 요구 일부 수용하는 등 **마일 간 합의 이뤄질 경우 나머지 참가국도 합의안 보고 일괄 타결 들어갈 가능성** 제기(일본 언론 보도, 1.29.)

자료 : 문화일보(2015.1.28.) / 서울경제(2015.1.29.) / 아시아경제·한국경제(2015.1.30.)

〈일본, TPP 협상 앞두고 미국쌀 수입 확대〉

- **[일본, TPP 협상 앞두고 미국산 주식용 쌀 수입 확대]** 쌀 최소수입량 내에서 미국산 주식용 쌀 수입 추가 증대 방안 검토(니혼케이자이신문 보도, 1.25.)
 - ※ 현재 일본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쌀의 최소수입량 연간 77만톤으로 규정. 이와 별도로 주식용 쌀 수입은 10만 톤 정도 반면 미국은 일본에 주식용 쌀 수입 규모 20만톤으로 확대 요구
- **(일본 정부 입장)** 추가 수입으로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일본에 추가 쌀시장 개방을 요구해 온 호주 등도 일본에 쌀 개방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부담

자료 : 매일경제(2015.1.26.)

□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 **[제13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 1.29., 중국]** 거시경제정책, 산업투자, 신기술, 도시화, 벤처투자, 대기오염방지,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분야의 협력 방안 심도 있게 논의
 - ※ (한국)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수석대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총 13명
 - (중국)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수석대표), 국제사, 기획사, 환경자원사, 종합사, 고기술사 담당 국장 및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총 12명
 - ※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 2013년까지 12차례 개최하여 양국 경제 현황 및 금융·산업 등 주요 분야 협력방안 논의
- **(주요 내용)** △최경환 부총리,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조속한 완료 제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공동연구 과제 선정 등
 - ※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2013.10.)에서 제안.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교역·투자 활성화 등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의 개방 유도 등이 주 내용
 - ※ ※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카자흐스탄에서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최초 제안(2013.9.), 경제벨트(一帶)와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

㉔ 농정이슈

- 자료 : 연합뉴스이데일리·한국경제TV(2015.1.27.) / KBS·YTN(2015.1.29.) / NEWSis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1.30.)
-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2015.1.26.),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2015.1.29.)

□ 다보스 포럼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Informal WTO Ministerial Gathering, 1.24.)]** WTO DDA 작업계획(Doha Development Agenda work program) 등 'Post-발리 작업 진전방향'에 대해 논의
 - ※ (참석자) WTO 사무총장, 미국·중국 등의 통상장관 또는 고위급 대표(한국, 최경림 통상차관보
- **(다보스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방안 등 WTO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
 - (2014년 참석)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인니, 멕시코, 사우디 등 23개국 통상장관 및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 **(주요 내용)** 2015.7월까지 DDA 작업계획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농업,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 3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 2015.7월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작성 시한: 발리 각료회의(2014.12.)에서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작성 시한 설정(2014.12.) → 2014.7월 이후 '식량안보 공공비축·무역 원활화협정'간 연계 논의로 작업계획 작성 논의 지연 → 2015.7월로 작성시한 재설정(WTO 특별 일반이사회 결정, 2014.11.27.)
 - **(정부 입장)** WTO DDA 작업계획 수립을 계기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논의 재개 가능성 전망, 이에 대비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수렴 거쳐 DDA 협상전략 재검점

자료 : news1·머니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2015.1.26.)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_「다보스 포럼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2015.1.26.)

□ 제11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 **[제11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1.27.~29., 태국]** 한-아세안 FTA 연내 개선 위한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 논의, 이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0차)도 개최
 - ※ 상품협정(2007.6.), 서비스협정(2009.5.), 투자협정(2009.9.) 발효,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

㉔ 농정이슈

- **(향후 일정)**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관련 규정(제15.2조)*과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합의(2012.8.)*에 따라 논의 결과를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 보고(2015.8.)
 -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15조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를 적용 조건 및 민감 품목군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검토
 - ※※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2012.8.) 시 제12차 회의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상품협정 개선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제출토록 합의
- 자료 : 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1.27.)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연내 개선을 위한 협상 참여 -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2015.1.27.)

□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 **[관세청, 먹거리 불법반입 및 수입산 제수산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 특별단속 실시, 1.26.~3.6.]** 설·대보름 앞두고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집중 단속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 대대적 실시, 생산자단체(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 통해 단속효과 극대화
 - **(주요 단속 품목)**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 22개 품목(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뭇류, 공산품,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 자료 : KBS·YTN(2015.1.25.) / 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헤럴드경제(2015.1.26.)
참고 : 관세청 보도자료_「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 수요집중기 대비 불량먹거리 근절 및 원산지표시위반 근절 -」(2015.1.23.)

□ 농업의 6차산업화 위해 하우스 막걸리 도입 추진

-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7.]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규모로 직매장 설치 가능,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 요건 완화해 임시적으로 제조면허 받아 술 제조·판매 가능**
- **[농식품부, 하우스 막걸리* 도입...고급브랜드화 추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 육성** 위해 하우스 막걸리 도입* 밝혀, 현재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 중, 한식당 등 자체 브랜드 붙여 소량 생산·판매 가능할 전망
 - ※ ‘집 막걸리’로 음식점이나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막걸리

㉔ 농정이슈

자료 : 연합뉴스TV(2015.1.25.) / 세계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한겨레(2015.1.26.) / KBS·MTN·SBS·농민신문(2015.1.28.) / 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1.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 향후 전통주 관련 혜택도 부여되도록 지속 노력 -」(2015.1.28.)

□ 식품업체 국산 농산물 사용비중 증가

- **[농식품부·aT,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1.28.]** 2013년 중 식품 제조업종별 원재료 조달 및 이용실태 조사
 - ※ (조사품목 및 대상) 쌀, 밀, 콩, 옥수수, 백설탕, 인삼, 배추, 무 등 114개 품목의 원료 소비 실태 조사 결과, 2014년 8월에서 11월까지 전국의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3,500개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 실시
 - **(농수축산물 원료 사용량) 1,508만 톤, 이 중 국산 원료는 31.2%(470만 톤),** 2012년 29.7%(448만 톤) 대비 1.5%p(22.3만 톤)↑
 - ※ (금액 기준) 전체 원료 사용금액 16조 4,698억 원 중 국산은 7조 9,256억 원으로 48.1% 차지, 2012년(42.4%) 대비 5.7%p(5,854억 원)↑
 - **(국산 원료 비중 90% 이상인 품목) 23개(원유, 계란, 배추, 무, 인삼, 홍삼, 김 등) 품목,** 이들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329만 톤으로 **전체 국산 사용량의 70% 차지**
 - **(국산 원료 선호 이유*) 소비자의 원산지 민감성과 고품질 프리미엄 식품 수요,** 수입산은 가격과 안정적 물량 공급 때문에 구매
 - ※ 원산지 민감원료(33.3%) > 조달용이(28.3%) > 신선 원재료(19.4%) > 외국산과 가격차 없는 품목(5.4%) 순
- 자료 : NEWSis·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이투데이·파이낸셜투데이(2015.1.28.)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1.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식품업체 가공식품 원료로 국산 농산물 사용 증가! - 2013년 중 가공식품 원료 1,508만톤 중 국산 470만톤(31.2%) 사용, 2012년 29.7% 대비 1.5%p 증가, 원료 구매금액의 48.1%, 2012년 42.4% 대비 5.7%p 증가」(2015.1.28.)

□ 2014년 종자시장 신품종 1,917개

- **[2014년 종자시장 신품종 1,917개, 전년대비 18%↑]** 매년 1,500~1,600여건의 신품종이 종자시장에 출시, 2014년에는 특히, **채소류 신품종이 큰 폭으로 증가**
 - **(작물별) 채소류 1,079품종(56%) > 화훼 514(27) > 과수 163(9) > 식량 94(5) > 특용 32(3) 순**
 - ※ TOP 7: 고추 317품종, 토마토 117, 무 89, 양파 75, 국화 72, 배추 69, 상추 53
 - **(품종보호로 출원 육성자에게 독점 실시권 있는 품종) 621품종,** 전체의 32%
 - **(신규 진입 작물) 10종(화훼류 8종),** 누적 작물수는 319종으로 다양화

▣ 농정이슈

자료 : KBS(2015.1.26.) / 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1.27.) / 농민신문(2015.1.28.)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5.1.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2014년 종자시장 신규 진입 품종 18% 증가 - 총 1,917품종으로 채소류 신품종 증가가 주요 요인 -」(2015.1.26.)

□ 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확대

-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 1.28.]** 20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추진 계획 등 심의의결
 - **(주요 내용)** △10월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무·백합·카네이션 추가***,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중인 과수 5개 품목 (사과, 배, 뽕은감, 단감, 감귤)의 경우 **사과 추가**,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 대폭 확대, △벼 도열병 보장 특약, 85%90% 보장형 상품보급, 60% 보장형 보험료 지원 확대(50% → 60),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 → 연중 가입,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 신설 등
 - ※ (2014) 59개(농작물 43, 가축 16) → (2015) 62개(농작물 46, 가축 16)
 -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

자료 : YTN(2015.1.29.) / 국민일보·NEWSis·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1.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도 높이고 지원도 늘린다. -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15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의결, 대상품목 확대, 실손 보장강화, 가입지역 및 시기 확대 등 추진」(2015.1.29.)

□ 소나무 재선충 전국 확산

- **[국가적 재난 대책 필요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 지속]** 정부, 2013년 가을부터 시작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 결과 정리(2014.5.)하면서 ‘재선충을 막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재선충 방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면적* 증가**
 - ※ (정부 노력)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추진단 운영, 201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1.21.)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모색
- **(피해 현황)** (2011) 9개 광역, 46개 시·군 → (2012) 10, 50 → (2014) 13, 64 → (2015.1.20. 현재) 13, 72, 이 추세라면 앞으로 **3년 내 소나무 멸종** 우려 제기
-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 2017년까지 완전방제 달성)** 산림청장,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1.28.) 참석해 재선충 피해목 (2013) 218만 그루 → (2015) 33 → (2016) 10 → **(2017)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하겠다고 보고

▣ 농정이슈

자료 : KBS(2015.1.25.) / SBS·경향신문·국민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2015.1.26.) / 세계일보·한국농어민신문(2015.1.27.) / 농민신문(2015.1.28.) / 농민신문(2015.1.30.)

참고 : 산림청 보도자료_「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추진단 운영 - 민·관·학 모여 재선충병 예방 대응체계 확립, 방제기술 개발 -」/「산림청, 2015년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협력 강화해 국민편익 높여 -」(2015.1.21.), 녹색연합 보도자료_「소나무가 사라지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현황」(2015.1.26.)

□ 구제역 및 AI 발생 주요 동향

- **[구제역 발생 동향, 2015.1.29.23시 기준] △총 70건(양성 69, 음성 1), △매몰 대상: 72농장(78,142두수)**
 - **(농식품부·행정자치부 장관, 구제역·AI 현장 방문, 1.28.)** 경기도 포천과 여주시 구제역·고병원성 AI 상황실 방문해 철저한 방역체계 당부
 - **(구제역 국제신고 축소 신고 관련) (언론)**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 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현재까지 세차례만 보고, 나머지 60건 누락 ↔ **(정부*)** 충북 진천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14.12.4.)되어 OIE에 즉시 통보(2014.12.5.), 이후 2건에 대해 추가로 OIE에 통보하였으나 현재 진행 상황, 조속한 시일 내 OIE에 통보 예정
 - ※ 구제역 발생상황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SMS 발송 등 통해 언론에 정보 제공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 구제역 발생 정보 축소 신고할 이유가 없음.
 - **(구제역 백신 효능 관련) (언론)** △정부는 백신효능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정부 보고서에서도 국내 구제역 백신효능이 비교적 낮다고 분석 ↔ **(정부)** △정부보고서는 가축위생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며, 백신 안전성 전 세계적으로 입증

자료 : KBS·경향신문·연합뉴스(2015.1.26.) / KBS(2015.1.28.) / NEWSis·아시아경제(2015.1.29.) / 농민신문(2015.1.30.) / 농촌여성신문(2015.2.2.)

참고 : 농식품부 보도해명자료_「“구제역 국제기구 축소 신고에 엉터리 해명”(KBS 뉴스 1.23) 보도 관련 해명」(2015.1.24.),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행정자치부 장관 방역현장 목소리 경청」(2015.1.27.), 농식품부 설명자료_「“정부 보고서도 ‘구제역 백신 효능 낮다’ 인정”(KBS 뉴스광장 1.28) 보도 관련 해명」(2015.1.28.), 농식품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_「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상황」(2015.1.30.)

- 중국 여행 한 캐나다인 H7N9형 AI 감염, 복미 첫 사례(AP통신 보도, 1.26.)

자료 : KBS·YTN(2015.1.27.) / 매일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1.28.) / KBS·YTN(2015.1.29.) / 연합뉴스(2015.1.30.)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효율적 차단방역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2013.2.)하여 단계적 확대**,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재 입법예고(1.20.~3.4.) 중

농정이슈

- ※ 2010~2011년 고병원성 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3.)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
- ※ (2013.2.)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 (2014.2.) 전업규모 → (2015.2.) 준전업규모 → (2016.2.) 소규모(50㎡ 초과)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업 시행령 개정 추진〉

- 닭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 15㎡ 미만 → 10㎡ 미만으로 등록 대상 확대
- 종축업, 부화업 및 가축사육업 허가시설 및 장비기준에 농장 방역실, 축사 전설 등 신설,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기준 구체화
-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시설면적 기준 강화
※ 케이지(cage) 0.05㎡/마리 → 0.055㎡/마리, 평사 9.19㎡/마리 → 9㎡/마리

자료 : 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라헤럴드경제(2015.1.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업 시행령 개정 -」 (2015.1.29.)

- [AI구제역 여파로 닭과 오리, 돼지 등 신선육 수출 급감] 농식품부 aT 자료(1.28.)에 따르면, 2014년 육류 수출(수출물량 기준, kg)이 전년대비 **오리고기* 88.74%↓**, **돼지고기 신선 35.58%↓**, **닭고기 신선 28.21%↓**,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AI-구제역이 근절되지 않아 **2015년 신선육 수출 어려움 전망**
※ 2014년 오리가공육 수출 거의 없음(aT 자료).

자료 : KBS아주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1.28.)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1.27.)

개요

- [국무회의 개최, 1.27.]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금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2014.12월 국회 통과한 국제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정 내용
농업인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20 → 30km)
	농지 대토 시 양도 소득세 100%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 소득세 면제	
	영농자녀에 농지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 영농자녀 요건(20km 이내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영농) 삭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한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 포함 • 농업외소득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
농협	영농상속공제(최대 5억 원)	• 적용 대상에 축사·건축물 및 그 부지 추가 • 피상속인 범위 확대(20 → 30km)
	농업임용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농업용 기자재 5종 추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 임업인 및 임업용 기자재 추가
	농협이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제지주 및 자회사 추가
	농협에 영세를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농협의 주류중개업 면허	
법인 등 기타	경제지주 및 자회사가 농축협에 지도 사업·경제사업 자금지원 사업 시 손금 인정	• 신설
	일선조합 통장 인지도 현금납부	• 중앙회가 일괄납부 가능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 대상 범위 축소 ※ 농자임야목적용지가 도시에 편입된 지 2년 →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1억 원 이하 60%, 1억~2억 원 55%, 2억 원 초과 45% • 과세기간별 매입액이 불균등한 경우 공제한도 계산 방식 별도 적용(1년간 매입액 기준으로 계산)

농식품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산지유통 정책」

□ 개요

- **[산지유통관련 사업 개편 완료]** '산지유통 사업 개편 T/F(2014.6.~11.)' 운영 통해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정책 수혜자의 편의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대폭 강화

□ 주요 개편 내용

- **[편의 제고]** 산지조직의 농산물 확보자금 중 1~2%의 우대금리 수혜구간 확대 (50% → 80)
- **[지원 확대]**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 지원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지원규모 확대 및 지자체와 협업 강화, APC 개보수 지원 신설 등
- **[투자효율성]** 산지유통 관련 자금의 통합 운영(정부+농협) 및 조직별(농협, 농업법인) 평가 분리
- **[관리 강화]** APC 건립지원 센터 운영, 임의자조금 줄임제
 - ※ 5개 대상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농산물 확보자금(용자), 3,600억 원),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APC건립, 167억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산지조직, 25억 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81억 원),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80억 원)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개요

-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 발표, 1.30.]** 인간생활과 밀접한 동물 이용의 윤리성 제고와 상생공존 문화 확산 위해 정책 방향 제시

□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반려동물]** 유기동물감축 위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유기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 제고
 - ※ 유기동물 발생 수: (2013) 97천 마리 → (2016) 85 → (2019) 70
- **[농장동물]**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 복지 최소 기준 확대 설정,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
 - ※ 인증축산물 비율: (2013) 1% → (2016) 4 → (2019) 8
- **[실험동물]**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 도입,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및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 ※ 실험기관 지정 수: (2013) 0개소 → (2019) 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1.30.)

연구지원 2014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2015.1.27.)

□ 개요

- **[조사목적]** 양곡수급계획, 식생활 개선, 식량생산 목표 설정, 식량문제 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대상기간]** 2013.11.1.~2014.10.31.(2014년 양곡년도 기준)
 - **[조사대상 및 방법]** 가구부문 1,559가구(농가 560, 비농가 999), 사업체부문 2,907사업체(식료품음료제조업 해당 사업체) / 면접조사

□ 2014년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 **[연간 1인당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 73.8kg**, 전년대비(75.3kg) 2.0% ↓
 - 1981년 이후 양곡 소비량 감소 추세 지속
 -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한 1967년 196.8kg의 37.5% 수준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65.1kg**, 전년대비(67.2kg) 3.1% ↓
 - ※ 쌀 소비량(1인당, kg): (2011) 71.2 → (2012) 69.8 → (2013) 67.2
 - 전체 양곡 감소량 1.5kg(△2.0%)보다 더 큰 폭 감소
 -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136.4kg의 47.7% 수준 소비량에 해당
- **[연간 1인당 기타 양곡* 소비량] 8.7kg**, 전년대비(8.1kg) 7.4% ↑
 - ※ 기타 양곡 소비량(1인당, kg): (2011) 7.4 → (2012) 7.3 → (2013) 8.1
 - ※ 보리쌀, 밀가루, 잡곡(좁쌀·수수쌀·메밀·울무 등), 두류(콩·팥·땅콩·기타두류), 서류(고구마·감자)
 - **[양곡별]** 보리쌀 1.3kg, 밀가루 1.2kg, 잡곡 1.0kg, 두류 2.5kg, 서류 2.8kg
 - ※ 전년대비 소비량 보리쌀 0.0%, 밀가루 7.7%↓, 잡곡·두류·서류 각각 25.0%·19.0%·3.7%↑
 - **(전체 양곡소비량에서 기타 양곡이 차지하는 비중) 11.8%**, 전년대비(10.8%)대비 1.0%p 상승

연구지원

- **[용도별 양곡 소비량]**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73.8kg)의 97.2%(71.7kg)는 주부식용으로 소비
 - (주부식용 소비비중) (1998) 95.1% → (2014) 97.2
 - (기타음식용(장류, 떡·과자류, 그 외) 소비비중) (1998) 4.9% → (2014) 2.8
- **[농가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 121.3kg, 비농가(70.0kg)의 1.7배
 - (농가 1인당 쌀 소비량) 농가(104.7kg) > 비농가(61.9kg)
 - (농가 1인당 기타 양곡 소비량) 농가(16.7kg) > 비농가(8.1kg)

2014년 사업체부문 쌀소비량조사 결과

- **[사업체부문* 연간 쌀 소비량]** 534,999톤, 전년대비(526,140톤) 1.7% ↑
 - ※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 부문
 - (쌀 소비량 많은 업종) 떡류 제조업(35.2%)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18.4%) > 주정 제조업(14.7%)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0%) 순*
 - ※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의 78.3% 차지
-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주요 추이**
 - (항목별) (전년대비 증가) 주정제조업*(41.2%),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5.1%), 장류 제조업(8.7%) / (전년대비 감소)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5.8%),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5.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3.9%)
 - ※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에틸알콜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 ※ ※ 씨리얼식품·선식·누룽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KRE리porter 현장여론

현장여론 2015년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과 바램

자료: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1. 1. ~ 1. 31. (총 40건)
- 수집대상: KRE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올해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과 바램

- 올해 정초부터 **구제역과 AI 발병으로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림. 하루 속히 구제역과 AI 병원균을 잡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관계당국, 축산농가, 온 국민이 현재 발병지역과 주변지역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임. 예방차원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임.<최영호, 충남 부여 외 1>
- 쌀 관세율 513%가 적용되면 시판되는 쌀 가격보다 2배가 비싸지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게다가 쌀 의무 수입량이 50만 톤이면 관세가 있다 해도 무관세 수준으로 쌀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임. **FTA 추진과 관련해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함께 극복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임.<박태우, 경남 함양 외 2>
- 우리 농업은 국제화 시대, 한중 FTA 추진, 고령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위기를 맞음.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FTA의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해 농업피해를 보전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기준 강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및 기술 개발, 우리 농산물 홍보** 등이 적극 요구됨.<김용덕, 경기 남양주 외 1>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 언제나 풍년농사와 곡물수입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며,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 힘든 식량위기가 올 것이 분명한데 식량자급률이 약 27%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태만한 농업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됨. **우수한 해외농업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정착시키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임.<박현근, 강원 형성>
- 우리나라 농업의 재배기술 발달로 경쟁력 확보, 생산량 증대를 이루고 있음. 시설 채소, 화훼, 과일 등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농업 종사자의 우수한 영농 기술을 후진국에 수출, 기술 지도**를 통해 로열티를 받고 우리의 것을 홍보해 더욱이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농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람.<임충빈, 경기 안성>
- 생산과 유통조건이 우수한 품목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농정은 오히려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만 가져올 뿐 수입농산물이 들이닥칠 미래에 대비하지 못할 것임. **같은 품목 생산만을 계속해서 장려하지 말고 신 농작물 개발에 힘쓰고 기존에 있던 작물을 제대로 생산판매-유통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변화 하길 바람.<김상우, 제주 서귀포>
- 지난해 하우스 농가의 70-80%는 대부분 적자인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면 농산물 과잉생산에 있음.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고 영농경력이 적은 귀농인들이 지원만 믿고 농사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함. 조금만 고쳐도 쓸 수 있는 시설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느니 뭐 고치는 식으로 새로 짓기만 하니 시설하우스가 넘치고 있는 실정임.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기 투자된 노후시설의 수리보수를 지원 하는 것이 낫다고 봄.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유지 보수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함.<유영조, 강원 영월>
- 양파재배를 예로 들면 정부에서 양파 모종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갈아엎고 또 그 피해보상을 정부에서 해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실정임. 동일 품목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농가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해 **지나친 보조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함.<김정오, 경남 거창>
- 201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해 기존 난방비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하였고 향후 계속해서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지난해 70%의 설계만으로도 난방비 절감 효과가 매우 높았는데 올해 신청자에게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 최대부하용량의 90%용량까지 지원'이라는 항목을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90%로 적용해 농가에게 통보하였고, 지난해 총 사업비에 수 천 만 원 상승해 자부담 금액이 커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사업비에서 약 7-9%가 한국농어촌 공사의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로 지출되는 데 그 비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사업의 취지와 효과는 매우 좋지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며 수동적인 업무 진행 방식의 개선이 시급함**.<김경태, 경기 용인>
-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불안정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을 제시해 생산비가 그에 적절하면 농사짓고 생산비에 미치지 못 하면 품목을 전환해 생산할 수 있게 **'농산물가격 사전공시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음. 아무리 많이 생산되어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정부의 안정적인 농정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농산물을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임.<김병철, 경남 김해>
-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농협 택배사업을 시행한다 하니 더욱이 접근성이 좋아 지고 신선한 배송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농업인을 최우선 수요대상 으로 하여 일반택배 보다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고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개선, 신속한 배달체계 마련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임. 또한 택배 사업의 수익 일부를 조합원 복지사업이나 영농후계자 양성 등 농업을 위한 자금 으로 활용해 주길 바람.<최영호, 충남 부여>
- 버스 배차시간이 길고 거리가 멀어 보건소 하나 다니는 것도 농촌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임. 보건소, 미용실, 은행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 봉사자를 지원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에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람. <김옥순, 전남 장성>
- 지자체에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허가해 주고 있어 해마다 많은 면적의 농지가 용도변경으로 잠적되고 있음. 매년 농지는 줄어들고 농업 지원책과 젊은 농업인 유인책이 많지 않으니 농촌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현실임. **농지전용을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절대적으로 농업과 농촌 보존을 위한 농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김병철, 경남 김해>
- 귀농귀촌인에게 주택분양, 임대 등 주거공간을 제공해 농촌의 정착을 돕고 파트 타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 인력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를 연계한 새로운 농정 마련이 요구**됨.<정소정, 제주 제주>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